“우병우 민정실, 공정위에 CJ고발 요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법정 증언… 공정위 고발 조치 안해 “민정수석실에서 불만 있었다고 들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CJ 그룹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앞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고발을 왜 안 하느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CJ 고발을 요구한 게 민정비서관이란 것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이같은 고발 요구가 CJ 측의 '좌편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으로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며 즉답하지는 않았다.

전북도 국감장 앞 언론노조시위 23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국감장 앞에서 KBS 언론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시 공정위에서는 실제로 CJ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책상에 놓여진 기록을 집중해서 보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태도 문제로 제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도중 우 전 수석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출국 금지 상태가 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국정원 문건 靑반납' … 대검 감찰중”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정황 문건을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로 반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선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3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관련 문건 반납 경위 등을 물었다.

윤 지검장은 “중앙지검으로 오고 나서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며 “당시 사건을 취급했던 검사들이 적절하게 사건을 취급했는지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감찰 조사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문건 반납 사실을 알게 됐을 당시 기분을 묻자 윤 지검장은 “그런 게(문건) 좀 있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증거를 은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느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대검 감찰조사 중이라 결과에 따라 통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단서나 혐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진상 확인 중에 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를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과 2015년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은 “수사팀은 디도스 재판과 관련 없다고 해서 돌려준 것 같다”며 “반납 경위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당시 실무진이 어떤 판단으로 반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김승환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 청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한다.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분야의 적폐청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인단에 참여해 국정원에 내 파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전북교육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북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캠페인을 벌일 '내놔라시민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뉴시스

박성중 “축소도시 공공시설 '적자' 너무 크다”

도내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해당… 익산 적자 69억으로 규모 가장 커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에 전북지역에서는 4개 시·군이 포함된 가운데 축소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축소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과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축소도시'는 전국에 20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에는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등 4개 시군이 축소도시에 해당됐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면서 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또한 적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익산의 적자는 약 69억원(2016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런 적자 상황에서 축소도시들의 관공서 신축 및 증·개축 상황은 여전했다.

익산과 김제지역의 경우 내년에 공공시설 1개 추가 건립에 각각 30억원과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

박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심이 횡하는 느낌이 들면 도시의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적자 규모가 크면 후세에 부담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휴시설을 잘 활용해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지방쟁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번 신축할 때 여러 시설물이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학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인구가 줄면서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뉴시스

황영철 의원 “전북지역 대피시설 턱없이 부족”

전쟁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전북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3번째로 읍면동 대피소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읍면동(241개)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은 60.6%로 전남(69.7%)과 충남(63.2%) 다음으로 높다.

또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 또한 전체의 70.1%에 달했다.

이는 전북도민 28.2%에 해당하는 52만4006명으로 전쟁 등 유사 시 실제 대피할 곳이 없는 것이다.

시군별로 보면 고창과 순창, 임실, 진안지역의 경우 읍 1곳에만 주민대피시설이 있고, 도내 전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시만 33개 읍면동 전체에 대피소가 있다.

황 의원은 “전북은 14개 시군에 지정된 대피소의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피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